

“또 탁상공론... 누굴 위한 정책?” 소비자 불만 ‘붓물’



자유한국당,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추진 가맹점주, 영업 제한인한 매출 감소 우려

누리꾼들 “득이러곤 하나도 없는 정책” · “골목상권과 별개” 비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안 하면 간판에서 ‘편의’라는 단어를 빼야지.” (A씨 거주 40대 이모씨)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추진 등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의 영업거리(250m) 제한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은 같은 프랜차이즈에만 해당되기에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도한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영업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데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특히 크다.

A씨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편의점인가. 간판에서 ‘편의’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에 사는 30대 오모씨도 “그 시간에는 편의점 외에는 문을 여는 곳이 없다. 편의점 영업제한과 골목상권 보호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며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따졌다.

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주가 다 서민이고,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재당한다. 득이러곤 하나도 없는 정책”, “편의점이 골목상권 아닌가”, “편의점 24시간 이랑 골목상권 활성화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미 강제 못한다... 자율성 침해” 당혹스런 편의점주들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편의점 심야영업금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일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를 통해 기존 ‘24시간 영업’을 깨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편의점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편의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골목상권 보호와도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데 왜 심야영업 금지를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현재 편의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심야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이보다 더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12조3항(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시행 중 자유한국당 정책 ‘퇴보’ 지적도

“다른 경쟁 유통업체가 문 닫는 새벽시간대 고객 많아 영업 금지되면 매출에 직격탄”

“선거철 앞둔 급조 정책” 비판도

특히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조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업주들이 심야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심야영업을 하면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거나 배분율을 올려주는 식으로 심야영업을 유도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편의점의 경우 다른 경쟁 유통업체가 문 닫는 새벽시간대 고객이 많은 편인데, 0~6시 영업을 금지되면 매출에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주 등 2만8000명이 가입돼있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는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편의점주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 편의점주는 “금지보다는 자율이 맞다”며 “여름에는 새벽 0시부터 2시까지가 골든타임인데”라고 말했다.

다른 점주도 “자율이 좋다”며 “예를 들어 밤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인 유흥가 편의점은 차라리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문을 닫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그 시간에 문을 열지도 않는 동네 슈퍼가 이익을 얻느냐”며 “선거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